

2. 내구재 수요 진작을 위한 소비자금융의 과제

□ 내구소비재 수요의 회복 기미

최근까지 여전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8년 3/4분기부터 회복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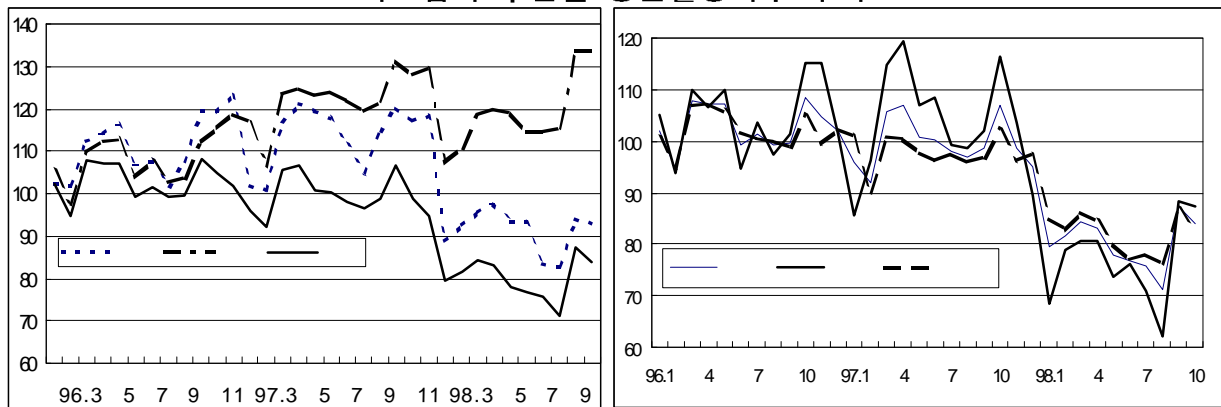
- 98년중 부문별 생산 지수의 변화 비교

-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를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등 부문별로 보면, 소비재 생산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또한, 소비재 부문에서 내구재가 비내구재보다 경기순환상 변동폭이 큼을 반영하여 생산 감소폭이 더 컸음

- 98년 9월 이후 소비재의 생산 회복세

- 소비재 부문의 제조업 생산지수가 98년 9월부터 회복 기미를 보임

< 제조업의 부문별 생산활동지수 추이 >



주 : 1995년=100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 소비자금융의 감소세

98년 중반 이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소비자금융 확대가 시도되었으나, 전체 가계 대출 규모는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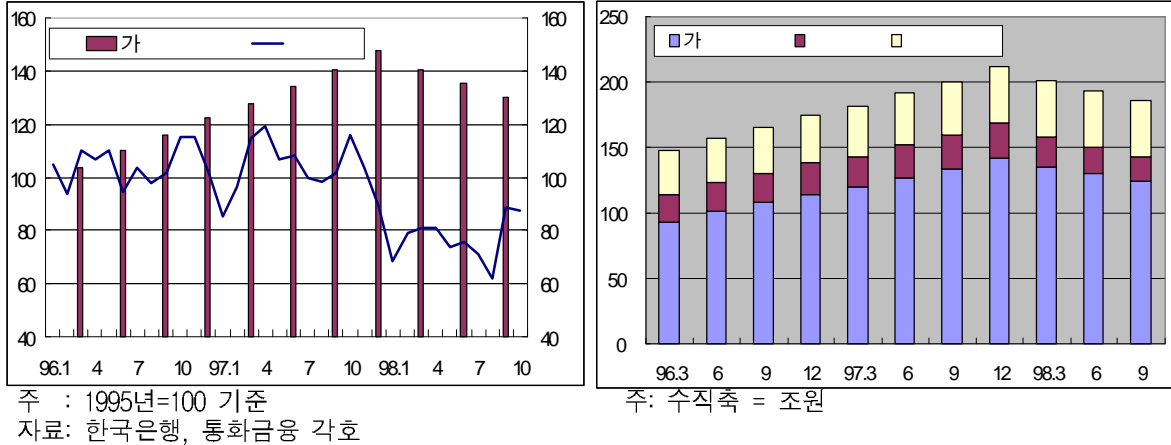
- 가계 신용의 지속적 감소세

- 내구소비재 생산이 9월부터 회복 기미를 보인 반면, 가계 신용은 가파른 감소세

를 계속 보이고 있음

- 가계 신용의 부문별로 보면 98년 9월중 주택자금대출은 97년말 대비 증가한 반면, 판매신용과 가계일반대출은 각각 -28.4%, -12.8%의 감소세를 보였음

< 가계 신용의 감소세와 특징 >



- 소비자금융 부진을 둘러싼 원인 진단

- (거시경제 측면) 정부의 구조조정 비용 지출 부담으로 경기부양 여력 부족,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계 심리 지속에 따른 민간지출 위축 등이 계속됨
- (공급 측면) 대출기관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업 여신 축소가 불가피하며, 가계 대출의 확대도 여신심사 기준의 강화와 금리 급락에 따라 유인이 감소
- (수요 측면) 가계 소득의 감소와 실업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가 소비지출의 축소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 대출, 판매 신용 등 금융 수요도 크게 감소
- (종합) 최근 은행 등의 대출 금리 인하가 단행된 상태에 있어 공급 측면에서 소비자금융 적극 확대가 현행 제도상 한계에 달하였으며, 수요 측면 부진이 심각

< 소비자 금융의 확대 여건 분석 >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신용등급 향상에 따른 시장 심리 안정화 및 금리 하향세 지속 -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 힘입은 차입 기업 및 가계의 부채 부담 경감 효과 - 외국계 은행의 시장 점유 확대에 의해 선진 소비자금융 기법의 빠른 도입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여전 - 엔화 약세화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 제2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관망세 - 98년 영업수지 적자 실현에 따른 은행권의 보수적 영업 지속 불가피

□ 정책 과제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부실 및 건전 여신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관련 제도 정비, 회전신용, 선불 카드 등 전자금융화 활성화, 소비자금융상의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을 부추길 소비자금융의 기능 미비

- (소비자금융 산업의 미발달) 미국의 파이낸셜 컴퍼니, 일본의 논뱅크 등과 같이 한국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이 활발한 영업 전개를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미흡
- (금융의 증권화 미흡 영향) 국내에 대출 유동화가 일부 이루어지고, 최근 자산담보부 증권(ABS)의 발행이 시도되는 정도에 그침에 따라, 은행등 대출기관의 유동성 확보력이 크게 뒤떨어져 적극적인 대출등 소비자금융 영업 확대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소비자 리스 도입 지연) 기존의 리스업이 기업 상대의 생산자 리스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옴으로써 최종소비자 대상의 다양한 소비자 리스는 아직 초기 수준임
- (생산·유통업체 중심의 판매신용 한계) 무이자 할부판매나 지불 방식의 다양화 등 지나치게 생산·유통의 당사자 업체 중심으로 소비자 신용이 제공됨으로써 실물 거래에 따른 파생위험 발생에 대비한 위험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소비자금융 활성화 과제

- (다양한 대출 유동화의 인프라 확충) 부실 여신 뿐만 아니라 건전 여신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효율성, 투명성 보장과 표준화 등의 관련 인프라가 요구됨
→ 대출 계약서나 거래 절차의 표준화, 시가평가제의 확립, 정보공시 지침의 명료화 등
- (금리 차등화) 신용정보 DB에 근거한 대출 가산 금리의 차등화 더욱 활성화
- (전자금융화 활성화) 전자 상거래의 급속 확산에 부응하여 회전 신용(revolving)¹⁾, 선불이나 직불 등의 신용카드 다양화를 꾀하고, 나아가 전자화폐의 도입을 적극 추진
- (세제상 소비 활성화) 현금위주의 거래선호 관행을 타파할 유통 관행의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 활성화를 촉발시킬 소비자금융상의 세제 혜택도 늘릴 필요 있음
(임진국 jklim@hri.co.kr ☎724-4018)

1)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 받은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월시켜 이자만 계속 지불하는 방식